

# Issue Paper

2010. 10. 6.

##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 목차

#### 요약

I. 한-EU FTA 개요

II. 제조업 관련 협정문의 주요 내용

III. 기업의 대응전략

IV. 시사점 및 종합 활용방안

작성 : 이종규 수석연구원(3780-8339)  
jking.lee@samsung.com  
정호성, 양오석 수석연구원

## 《 Executive Summary 》

2010년 10월 6일에 한-EU FTA가 정식 서명된다. 앞으로 한국 국회의 비준과 유럽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EU 개별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없더라도 2011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잠정 발효는 관세인하 등 대부분의 협정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식 발효와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

EU는 이미 2005년 對美 제조업 수출을 역전한 이래 한국 제1의 제조업 수출 시장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對EU 수출 중 9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제조업 수출은 FTA를 계기로 4.2~6.0%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한국기업들은 한-EU FTA가 제공하는 수출 기회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제조업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① 업종별 대응 차별화

기업은 한-EU FTA로 인한 기존의 경쟁력과 분업구조의 변화를 점검하여 각각 차별화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FTA로 인해 경쟁력 상승 업종은 적극적인 시장접근 전략을, 타격예상 업종은 정부지원 및 M&A 등을 통한 생존전략을, 분업가능 업종은 EU 기업과의 분업 확대를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② 관세인하 효과 극대화

기업은 관세율 인하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기업의 주력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스케줄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비용을 마케팅 비용이나 R&D 투자로 전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EU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원산지규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

관세인하의 혜택을 누리려면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출 계약 시에는 항상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충분한 생산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

### ④ EU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비관세장벽 극복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EU에서의 현지 부품 사용비율 준수, 환경규제,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EU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면서 비관세장벽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 ⑤ EU 시장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EU 시장은 회원국 간 높은 상호의존성(특수성)을 보이는 한편 회원국별로 소비자 선호가 다양한 시장이 형성(다양성)되어 있다. 또한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유럽 소비자들의 신중하고 까다로운 구매 태도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변화된 경제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사업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I. 한-EU FTA 개요

### 한-EU FTA가 정식 서명되고 잠정발효 일자도 확정

□ 한-EU FTA의 정식 서명 절차가 완료(2010년 10월 6일)

- 협상이 타결된 후 1년 3개월 만에 정식서명 절차가 완료
  - 협상타결(2009년 7월 13일) → 가서명(2009년 10월 15일) → 협정문 번역(6개월 이상 소요) → 정식서명(2010년 10월 6일)
- 방대한 분량의 협정문을 22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정식 서명 시점도 지연(당초 2010년 4월 예상)
- 또한 EU집행위가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수습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으로써 한-EU FTA가 지연

□ 정식 서명이 완료되면 유럽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잠정 발효될 예정(2011년 7월 1일)

- 자국 자동차 업계를 의식한 이탈리아의 반대가 있었지만, 잠정발효 시점을 2011년 1월 1일에서 6개월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sup>1)</sup>
- 한국에서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지 않아 국회 비준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일부 농업 및 축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유럽의회에서는 비준에 대해 일부 반대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유럽자동차협회(ACEA), 독일자동차협회(VDA),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 등의 일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독일경제협회(BDI) 등 상당수의 경제 단체들은 한-EU FTA에 대한 환영 입장을 천명

1) 또한 이탈리아는 세이프가드 조항에 따라 민감한 분야(소형 자동차 등)에서 수입이 갑자기 급증할 경우 해당 산업이 보호받게 됨을 강조

- 한-EU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통상 2~3년 소요)
  - 한국은 EU를 상대로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EU 개별국의 의회가 아닌 유럽의회의 비준만으로도 잠정 발효가 가능<sup>2)</sup>
    - 절차상의 비효율로 FTA의 효과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잠정 발효는 상품 관세철폐 등 대부분의 협정문 내용(90% 이상)을 포함하므로 정식 발효와 유사한 효력
    - 다만 EU의 배타적 권한 분야(exclusive competence) 이외의 몇 가지 조항은 잠정 발효에서 제외<sup>3)</sup>
    - 지재권 행사집행 일부 조항 및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이 이에 해당
  - 개별 27개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비로소 한-EU FTA가 정식으로 발효
    - 양측이 각자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서면 통보를 교환하고, 이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날에 정식 발효

#### EU의 FTA 타결 사례와 발효까지의 기간

- ▷ EU-멕시코 FTA: 1997년 12월 8일에 상품분야 조항들이 잠정 협정의 형태로 발효되었으며, 2000년 7월에 정식 발효
- ▷ EU-칠레 FTA: 2002년 11월 18일에 서명되어 2003년 2월 1일에 잠정 협정 형태로 발효되었고, 2005년 3월 1일 정식 발효
- ▷ EU-남아공 FTA: 1999년 1월 11일 서명되어 2000년 1월 1일에 무역 조항이 잠정 협정 형태로 발효되었고, 2004년 5월 1일에 정식 발효

2) 리스본 조약에는 한-EU FTA를 잠정 발효하는 데 유럽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EU 집행위는 정치적 고려 차원에서 한-EU F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 확보 후에 한-EU FTA를 잠정 발효

3) 잠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조항은 정식 발효 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한-EU FTA 협정문 전체 내용이 FTA의 적용 대상이 됨

## 한-EU FTA의 의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

-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EU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
  -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표를 시작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 이후 싱가포르(2006년 3월), EFTA(2006년 9월), ASEAN(2007년 6월) 등과의 FTA가 발효(총 17개국)
  - 한-EU FTA로 아시아와 유럽, 신흥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FTA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향후에도 한국은 선진국은 물론 인도, 메르코수르, 러시아, 터키<sup>4)</sup> 등과 같은 거대 신흥시장과도 적극적인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
- 최근 EU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한-EU FTA는 향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한 롤모델 역할
  - 과거 EU는 유럽 주변 지역 또는 과거 식민지 위주로 FTA를 체결
    - 기존의特惠무역 협정을 대체<sup>5)</sup>하거나 지역공동체<sup>6)</sup>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FTA를 추진
    - 주로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대부분 경제규모가 작은 신흥국들이 EU의 FTA 상대국
  - 하지만 EU는 한-EU FTA를 계기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
    -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EU는 인도, ASEAN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강조
    - 반면 주요국 선진국과의 FTA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전망

4) 터키는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어 제품들이 무관세로 거래되는데, 한-EU FTA가 발효되면 EU를 거쳐 터키에 반입되는 한국 제품에 대해 일일이 원산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5) 주로 유럽의 식민지였던 ACP 국가들에게 무역특혜를 제공

6) 메르코수르, GCC 등

한국 및 EU의 FTA 추진 현황

	한국	한국과 EU 공통	EU
발효	싱가포르('06. 3월) ASEAN('07. 6월 상품협정) 인도('10. 1월)	칠레 (한국: '04. 4월, EU: '03. 2월)  EFTA (한국: '06. 9월, EU: '94. 1월)	안도라('91. 7월) 터키('96. 1월) Faroe Islands('97. 1월) PLO('97. 2월) 튀니지('98. 3월) 요르단('00. 1월) 남아공('00. 1월) 모로코('00. 3월) 이스라엘('00. 6월) 멕시코('00. 7월) OCTs('01. 1월) 레바논('03. 3월) 이집트('04. 6월) 크로아티아('05. 2월) 알제리('05. 9월) 마케도니아('06. 2월) 카리브해안 15국('08. 10월)
타결 및 서명	미국('07. 6월 서명) 페루('10. 8월 타결)	한-EU 간 서명('10. 10월)	시리아('04. 10월 타결) 등
협상 진행	터키, 멕시코, 호주 등	GCC, 캐나다 등	인도, ACP, 메르코수르, ASEAN 등
검토	메르코수르, 이스라엘 등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파키스탄, 싱가포르, 이라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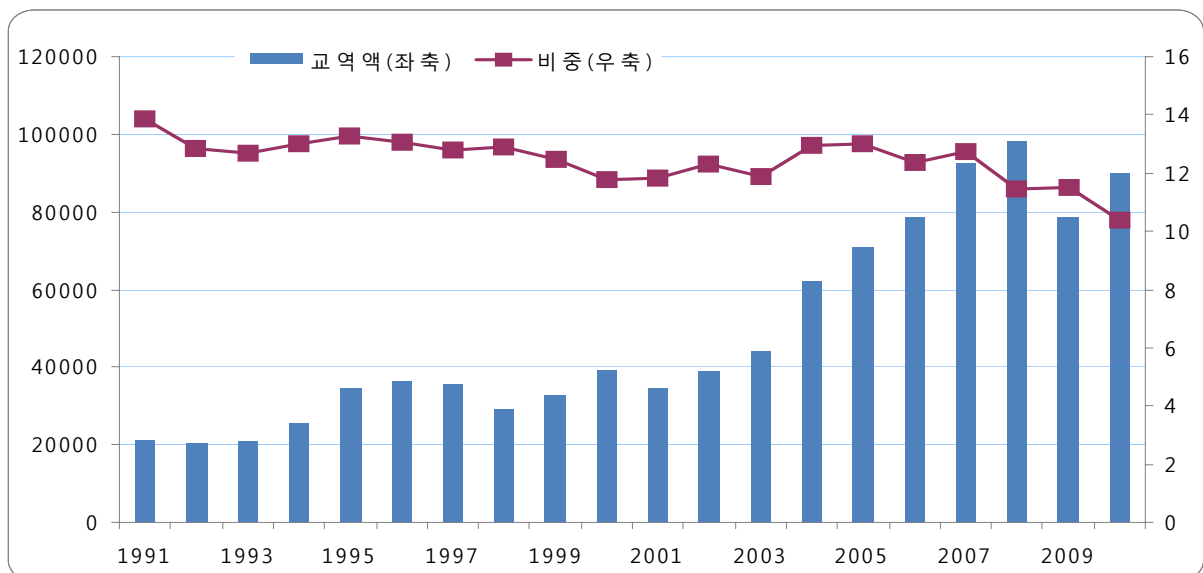
주: 1) OCTs: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EU 특정 국가들과 정치경제적으로 연결된 21개 소국  
 2)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3) Faroe Islands: 덴마크령 페로제도  
 4) ACP: 유럽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 지역 79개국에 대한 총칭  
 자료: 지식경제부 (2009). “한-EU FT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EU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한-EU FTA는 제조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 EU와의 교역은 1991년 212.4억 달러에서 2008년 983.6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
  -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5%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10% 이상을 유지(2009년 기준)
  - 단,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한국과 EU의 교역은 788.4억 달러로 축소(2009년 기준)
- 한국의 對EU 수출액은 466.1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가장 큰 규모였으나, 對EU 수입액은 322.3억 달러로 중국, 일본, ASEAN에 이은 4위를 기록
  - 한국의 對EU 수출은 1990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9년까지 연평균 약 8.0%씩 성장
  - 한국의 對EU 수입은 1990년 90.6억 달러에서 2009년 322.3억 달러로 연평균 약 6.5%씩 증가

한-EU 간 교역 규모 및 EU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2010년은 1/4분기 실적치에 4.35를 곱한 전망치(4.35는 최근 10년간의 연중 1/4분기 비중 평균을 고려해 연간으로 환산하기 위한 수치)

자료: Kita.net

- 금융위기로 인해 전체적인 수출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공산품목의 교역은 오히려 증가
- 對EU 수출은 약 20% 감소했으나, 조선과 LCD 수출은 오히려 증가
    - 한국의 對EU 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조선, 통신기기, LCD 등이며 수출 규모는 약 340억 달러로 전체의 72.8%를 차지<sup>7)</sup>
  - 반면 의약품, 자동차 등의 품목에서는 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등 EU의 한국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
    - EU로부터의 수입 상위 10대 품목은 의약품, 자동차 등으로 전체 수입의 29.6%를 차지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체 수입이 약 19.4% 감소했지만 펌프는 수입이 오히려 증가

품목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p)

구분	품목	금액(증가율, %)			비중(변화율, %p)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변화율
수출	조선	10,017	12,213	21.9	17.2	26.2	9.0
	통신기기	7,489	4,989	-33.4	12.8	10.7	-2.1
	LCD	3,920	4,666	19.0	6.7	10.0	3.3
	자동차	5,220	2,720	-47.9	8.9	5.8	-3.1
	차부품	2,389	1,767	-26.3	4.1	3.8	-0.3
	유제품	1,577	1,718	8.9	2.7	3.7	1.0
	반도체	1,934	1,473	-23.8	3.3	3.2	-0.2
	TV	1,442	918	-36.3	2.5	2.0	-0.5
	합성수지	1,041	825	-20.7	1.8	1.8	0.0
	타이어	758	653	-13.9	1.3	1.4	0.1
수입	의약품	1,611	1,561	-3.1	4.0	4.8	0.8
	자동차	1,544	1,261	-18.3	3.9	3.9	0.1
	차부품	1,546	1,089	-29.6	3.9	3.4	-0.5
	반도체장비	1,559	958	-38.6	3.9	3.0	-0.9
	반도체	1,204	900	-25.2	3.0	2.8	-0.2
	펌프	858	897	4.5	2.1	2.8	0.6
	정밀화학	1,234	798	-35.3	3.1	2.5	-0.6
	원동기	946	752	-20.5	2.4	2.3	-0.0
	화학제품	953	684	-28.2	2.4	2.1	-0.3
	기타기계	803	652	-18.8	2.0	2.0	0.0

주: 2009년 기준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MTI 4자리 기준)

자료: Kita.net

7) 이들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도 2008년 64.8%에서 8%나 증가



□ 한국의 對EU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한국의 對EU 수출 중 93.9%가 공업 제품(총 금액 기준)
  - 특히 자동차와 기계 부문의 수출이 72%로 높은 집중도를 보임
- 2005년 對美 제조업 수출을 역전한 이래 EU는 한국 제1의 제조업 수출 시장으로서의 위치를 고수

한국과 EU의 무역 (2009년)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EU 수출 (한국 수입)		EU 수입 (한국 수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산업	식음료	968	3.8	123	0.3
	기타	667	2.6	436	1.1
	에너지	492	1.9	1,661	4.2
2차산업	화학	4,508	17.6	1,701	4.3
	기계/자동차	12,232	48.1	28,373	72.0
	기타공업품	5,852	22.8	6,903	17.5
서비스업		827	3.2	183	0.5
합계		25,656	100	39,382	100

자료: Kita.net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 EU집행위는 한-EU FTA로 인해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이 0.46~0.84% 추가 성장할 것으로 추정

- 1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 생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제조업 생산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 제조업은 한-EU FTA로 인해 0.41~0.90%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EU FTA 발효 후, 한국의 제조업에서 가장 큰 수출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한국의 총 수출은 4.0~5.5% 성장하고 공산품 수출은 4.2~6.0%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EU FTA가 GDP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b>GDP</b>	<b>0.84</b>	<b>0.46</b>
-1차 산업	-0.45	-0.07
-2차 산업	0.90	0.41
-3차 산업	-0.23	-0.13
<b>총 수출</b>	<b>5.50</b>	<b>4.01</b>
-1차 산업	4.87	4.52
-2차 산업	6.02	4.16
-3차 산업	-2.72	-1.70
<b>對EU 수출</b>	<b>38.39</b>	<b>23.06</b>
-1차 산업	76.23	51.22
-2차 산업	37.51	21.82
-3차 산업	-2.45	-1.43

주: 시나리오 1은 현재 발효된 FTA만 포함시켰고 시나리오 2는 한미, 한-캐나다, EU-인도, EU-싱가포르, EU-캐나다 FTA를 포함

자료: Decreux, Y. (2010). The economic impact of the F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Kore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한-EU FTA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시점

☐ 한-EU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공산품 교역 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히 대비책과 활용방안이 필요

-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EU와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윈-윈이 가능
- EU는 일반기계, 정밀화학 등 제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대응방안이 필요
- FTA 이후 변화되는 교역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중요
  -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무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해 21%의 수출업체만이 FTA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

## II. 제조업 관련 협정문의 주요 내용

### 한-EU FTA 정식 협정문의 구성과 주요 내용

□ 협정문은 총 1,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상품, 서비스, 규범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www.fta.go.kr에서 열람 가능)

- 특히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품양허, 기술표준 및 환경기준, 원산지 규정, 관세환급 등에 관한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

한-EU FTA 협정문의 구성

챕터	챕터 명칭	주요 내용
상품	제1장 목적 및 일반적 정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목적 및 협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관세양허 부속서 비관세 부속서	내국민대우와 상대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규정 관세철폐 및 감축 계획 규정 비관세조치 합리화, 개선을 위한 약속 및 상호협력
	제3장 무역구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규정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기술표준, 적합성 평가절차의 무역제한 효과 최소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동식물 위생보호·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고 신속히 하려는 조치
서비스	제7장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 상거래 서비스 설립 양허 부속서	서비스 자유화 규범 및 협력 조항 분야별 개방 약속과 최혜국 대우 면제 리스트 등
	제8장 지불 및 자본 이동	국경 간 지불·자본이동과 관련된 자유화·예외 규정
규범	제9장 정부조달	민자사업을 포함한 정부조달시장 접근 확대
	제10장 지적재산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의 보호 및 집행
	제11장 경쟁	경쟁법 집행 관련 협력 및 보조금에 의한 경쟁 왜곡 방지
	제12장 투명성	협정 이행과 관련되는 국내법령 등 신속 공포 상대국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무역자유화 진전에 따른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 저하 방지
기타	제14장 분쟁해결	협정문 위반 여부 판정과 이행 절차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무역위원회 등 이행기구 설치, 협정 개정 및 발효
의정서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특혜 원산지 기준 일반원칙
	품목별 원산지기준 부속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원산지 판정 기준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기존 한-EU간 세관지원 협정을 협정문에 편입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시청각 공동제작 등을 포함한 문화 분야 전반에 있어서의 협력 증진

주: 협정문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자료: 외교통상부 (2009). “한-EU FTA 상세 설명자료.”

## 관세장벽: EU는 5년 내, 한국은 7년 내 관세 철폐

□ 한국에 비해 EU가 관세를 조기 철폐<sup>8)</sup>하는 비대칭적 방식을 채택

- 품목 수 기준으로 조기 철폐 비율이 EU는 99.4%, 한국은 95.8%를 차지
  - 한국은 일부 민감품목<sup>9)</sup>에 대해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
- 양국 간 제조업 경쟁력 차이, 관세율 차이를 반영하여 이익 균형을 도모
  - 한국은 기계·화학 부문에서, EU는 자동차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자국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양허안에 합의
  - 91.4%가 조기 철폐 대상인 한미 FTA에 비해 더 빠르고 포괄적으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예정

### 공산품 관세 철폐

(단위: %)

양허단계	한-EU FTA				한미 FTA			
	한국 양허(비중)		EU 양허(비중)		한국 양허(비중)		미국 양허(비중)	
	품목 수	수입액	품목 수	수입액	품목 수	수입액	품목 수	수입액
즉시 철폐(A)	90.7	69.4	97.3	76.7	89.9	81.0	87.3	85.5
3년 철폐(B)	5.1	22.4	2.1	16.6	6.3	13.2	4.1	6.9
조기 철폐(A+B)	95.8	91.8	99.4	93.3	96.2	94.3	91.4	92.4
5년 철폐	3.7	6.9	0.6	6.7	1.9	1.5	4.0	3.4
7년 철폐	0.5	1.3	-	-	-	-	-	-
10년 철폐	-	-	-	-	1.9	4.2	4.6	4.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기획재정부 (2009). "한-EU FTA 협상 주요 내용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 양측 관심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3~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대칭적 방식을 채택

- 양측 모두 자동차는 민감품목인 만큼 '즉시철폐' 대상에서 제외

8) 조기 철폐란 즉시 및 3년 내 철폐를 통칭

9) 기타 기계류, 순모직물, 건설중장비 등 40여 개 품목이 해당

- 한국 측의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3~5년 내로 관세 철폐 기간을 상이하게 조정
- 양측 모두 중·대형 자동차(배기량 1,500cc 초과)에 대해 3년 내, 소형 자동차(배기량 1,500cc 이하)에 대해 5년 내 관세 철폐를 실시

□ 대부분의 관세 철폐를 3년과 5년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으나, 이후 ‘만 3년’과 ‘만 5년’으로 확정하여 발표(2010년 2월)

- 상품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관세 철폐 시기가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
- 예: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될 경우 201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두 번째 관세가 인하되는 것이 기존의 합의였지만, ‘만’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는 2012년 7월 1일에 두 번째 관세가 인하
- 하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중·대형차 부문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
- 예: 처음 1~2년 동안 관세를 3% 인하, 3~4년차에는 2%씩 줄이는 방식을 채택

관세 철폐의 품목 및 시기

철폐시기	EU의 對한국 수출(EU→한국)	한국의 對EU 수출(한국→EU)
즉시	자동차부품, 계측기, 타이어, 복사기, 컬러TV, 냉장고(이상 8%), 직물제의류(8~13%)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2~5%), 냉장고(1.9%), 에어컨(2.7%), 편직물(8%) 등
	수입액 비중 70%	수입액 비중 76%
만 3년	의약품(6.5%), 기타정밀화학제품(5~8%), 안경, 펌프, 화장품, 중대형 승용차(이상 8%) 등	타이어(2.5~4.5%), 전자레인지(5%), 합성수지(6.5%), 베어링(8%), 중대형 승용차(10%) 등
	수입액 비중 22%	수입액 비중 17%
만 5년	접착제(6.5%), 기초화장품, 합성고무, 소형 승용차(이상 8%) 등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컬러TV, 카메라/수상기기, 소형 승용차(이상 8%) 등
	수입액 비중 7%	수입액 비중 7%
만 7년	건설중장비, 밸브, 베어링(이상 8%), 순모직물(13%), 기타 기계류(16%) 등	없음
	수입액 비중 1%	수입액 비중 0%

자료: 외교통상부 (2009). “한-EU FTA 상세 설명자료.”

## 비관세장벽: 기술표준 및 환경기준

- (자동차)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대신, 높은 수준의 기술표준과 환경기준이 명시
- (기술표준)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기준<sup>10)</sup>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대해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한국은 총 42개 국내 기준 중 범퍼충돌, 연료누출 등을 포함한 32개 항목이, EU는 대다수의 항목이 인정대상 기준에 해당
  - (환경기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sup>11)</sup>에 대해서는 EU가 2014년 도입할 예정인 새로운 OBD 기준에 대해 한국 OBD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환경기준) 배출가스 기준은 200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FAS(Fleet Average System: 평균배출량관리제도)<sup>12)</sup>가 적용되나, 1만 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과도조치 도입
    - 동 잠정조치는 한미 FTA가 발효되어 1만 대 이하 판매 제작자에 대한 배출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적용되며, 잠정조치상의 배출기준은 한미 FTA 합의내용보다는 강화된 기준

한-EU FTA 이후 배출가스 기준

한-EU FTA 발효 후 한미 FTA 발효 이전		한미 FTA 발효 후	
차량 대수	NMOG 수치	차량 대수	NMOG 수치
1~250대	0.047g/km (LEV 기준)	1~4,500대	0.047g/km (LEV 기준)
251~4,000대	0.039g/km		
4,001~10,000대	0.030g/km	4,501~10,000대	0.037g/km
10,001대 이상	0.025g/km (ULEV 기준)	10,001대 이상	0.025g/km (ULEV 기준)

자료: 외교통상부(2009). “한-EU FTA 상세 설명자료.”

10) 자동차 기술표준의 국제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58협정」(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상호인증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며, 48개 회원국으로 구성(2004년 11월 가입)

11)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출가스가 증가할 때 차내 계기판의 정비 표시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12) 제작자에게 다양한 배출기준을 허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자별 전체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

□ (전기·전자)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동 부속서의 적용범위로 규정하였으며, 유·무선 통신기기도 적용범위에 포함

- 국내법이 적합성 평가를 받는 품목을 positive list로 적시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전기용품에 대한 미래규제권 확보
-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국 간 교역 비용을 절감
  - 한국은 전자파적합성과 전기용품안전을 구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하고 인증기관에 신고하는 방식
  - EU 측은 전자파적합성, 전기용품안전(safety) 구분 없이 ‘공급자적합성 선언’(SDoC)<sup>13)</sup>을 적용

#### 현행 전기전자제품 인증제도

- ▷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 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며, 인증은 전파연구소에서만 받을 수 있음
- ▷ 전기용품안전(Safet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기술표준원이 지정한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에서 시험 및 인증 실시

□ (화학물질) EU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요구한 분야

- REACH<sup>14)</sup>: EU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등록·평가·승인을 의무화하는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 2006년 12월 채택, 2007년 6월 발효, 2008년 6월 시행
- 한-EU FTA 내에 화학물질 비관세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과 통상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

13) 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3자 시험 및 인증 절차 없이 생산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시험을 한 후 인증마크를 붙여 제품을 출시

14)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질관리제도

-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분야에서 보다 조화된 절차를 찾기 위해 '우수 실험실관리기준(GLP : Good Laboratory Practice)' 등 분야에서 협력

한국의 對EU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04	'05	'06	'07	'08
수출	1,287.7	1,388.9	1,649.0	2,166.6	2,638.8
수입	4,003.5	4,556.7	5,185.9	6,104.8	6,811.4

자료: Kita.net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개발·접근 촉진과 양자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한미 FTA 수준에서 합의

- 기본적으로 양측의 현행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
-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절차를 규정
  - 법·규정·절차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사법적인 검토 절차 도입 등
- 한쪽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sup>15)</sup>과 '우수실험실 관리기준'<sup>16)</sup>에 따라 수행
  - 국제 관행에 일치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동 평가의 수용 요청을 고려하도록 규정
  - 향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 및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설치

15)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16)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 쟁점이 되었던 원산지규정 및 관세환급

- (원산지규정) EU는 최초로 결합기준 대신 완화된 선택기준을 채택했으며, 자동차 원산지규정은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을 45%,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50%로 적용하기로 합의
  - EU 측은 그간 고수해온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한-EU FTA 협상에서 처음으로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으로 결정
  -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발효 1년 후 추가 논의할 예정
- (관세환급)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관세를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도입
  -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
    -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될 경우 발동 가능
    - 구체적 요건: 1)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 2) 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對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국한)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
  - 세이프가드의 발동 절차
    - 관세환급제도 검토 결과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당사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제한을 위한 협의 요청
    - 발동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한-EU FTA 분쟁 해결절차 적용 (객관적인 3인의 패널을 구성하여 결정)
    - 패널이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부합된다고 판정하면, 해당 품목의 환급관세를 5%로 제한(예: 현재 실행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5%만 환급)

### Ⅲ. 기업의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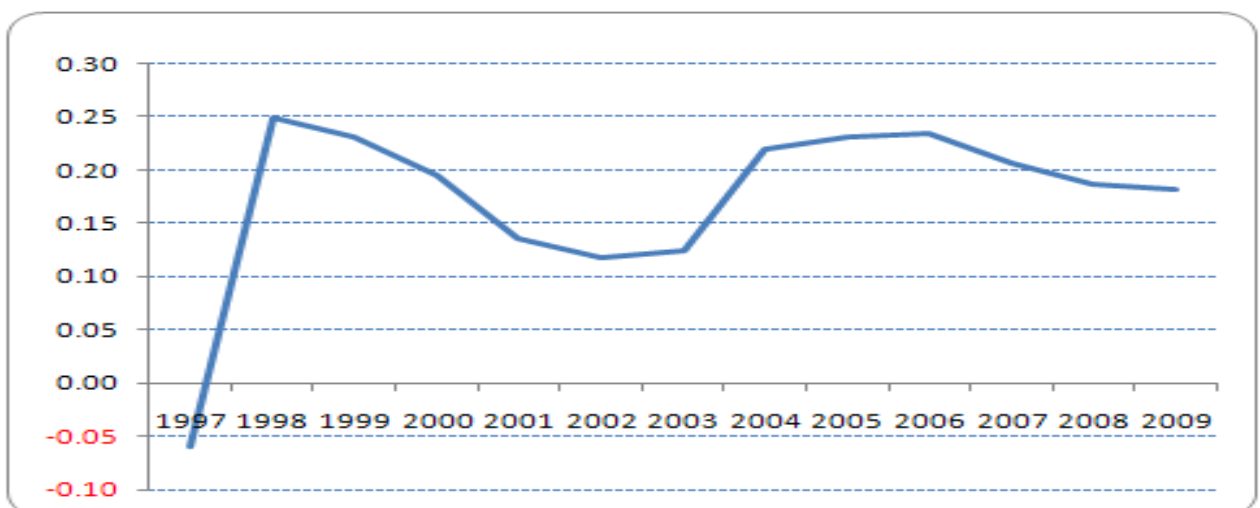
#### (1) 업종별 차별화 대응

####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양국 간 경쟁력을 분석

□ (전체 무역특화지수) 양국 간 무역경쟁력을 나타내는 전체 무역특화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이 비교 우위 상태를 유지

- 무역특화지수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
  - 무역특화지수<sup>17)</sup>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한국의 對EU 무역특화지수는 0.3을 초과하는 경쟁우위 상태는 아니지만 균형점에서 소폭의 우위 상태를 지속
  - 1998년부터 2009년 기간 0.12~0.25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

對EU 무역특화지수 추이



자료: Kita.net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7) 무역특화지수(TSI)는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 특화의 정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 특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또한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는데, 지수가 0 이상 1 이하이면 제품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냄. 통상 지수 0.3을 초과할 경우 경쟁우위로 판단

- (한국의 對EU 경쟁력 우위 업종) 조선, IT 등 분야에서는 한국이 EU에 대해 높은 경쟁 우위
- 한국의 對EU 수출 품목 중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동시에 최근 3년 평균 무역특화지수가 0.3 이상인 품목은 총 7개 품목
  - 이 중 조선, LCD, 통신기기 등은 무역특화지수 0.9 이상의 높은 경쟁우위 상태를 지속
  - 원유를 제외한 석유제품과 자동차도 중간 수준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 차이는 점차 축소

주요 경쟁력 우위 품목 및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상세	무역특화지수	수출	수입
8901	조선	0.97	12,194	81
9013	LCD	0.95	4,194	98
8517	통신기기	0.90	5,337	290
8529	전자부품(모니터)	0.84	1,639	104
2710	석유(역청유)	0.68	2,325	336
8703	자동차	0.53	2,720	1,261
8708	자동차 부품	0.37	1,650	740

주: HS 4단위 중 수출 10억 달러, 무역특화지수 0.3 이상 품목 (무역특화지수는 3년 평균)

자료: Kita.net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한국의 對EU 경쟁력 열위 업종) 의약품, 정밀화학 제품 분야에서는 EU가 높은 경쟁우위 상태를 유지
- 한국의 對EU 수입 품목 중 수출 규모가 5억 달러 이상이면서 동시에 최근 3년 평균 무역특화지수가 -0.3 이하인 품목은 총 7개 품목
  - 이 중 의약품, 정밀화학제품, 전자부품은 무역특화지수가 -0.9 이하로 심각한 경쟁열위
  - 파이프, 보일러 등의 일반기계, 엔진, 터빈 등의 정밀기기 등도 -0.6 이하의 경쟁열위 상태 지속

주요 경쟁력 열위 품목 및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상세	무역특화지수	수출	수입
3004	의약품	-0.96	17	1,047
3824	정밀화학제품	-0.93	21	528
8486	전자부품	-0.90	36	1,014
8414	펌프	-0.70	89	600
8481	파이프, 보일러 등	-0.68	110	503
8409	자동차부품(엔진)	-0.64	134	688
8479	일반기계	-0.45	254	1,006

주: HS 4단위 중 수입 5억 달러, 무역특화지수 -0.3 이하 품목 (무역특화지수는 3년 평균)  
 자료: Kita.net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한국과 EU의 경쟁력 균형 업종) 컴퓨터, 철강 등은 경쟁력 균형 상태에서 약간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 변압기 등은 균형 상태에서 약간의 열위를 보임

- 한국과 EU의 교역 규모가 4억 달러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0.3~0.3 사이의 경쟁력 균형을 이루는 품목은 총 6개 품목
- 비교적 경쟁력을 유지하던 반도체는 EU로부터의 반도체 부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이 점차 하락
- 실제로 경쟁력이 균형을 유지하는 업종 중 활발한 분업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품목들이 다수 존재
- 산업 내 무역지수 0.5 이상<sup>18)</sup>: 가구, 조립금속, 석유화학, 철강, 컴퓨터, 섬유, 자동차,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

주요 경쟁력 균형 품목 및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상세	무역특화지수	수출	수입
7219	철강	0.28	260	126
8471	컴퓨터	0.27	447	266
8541	반도체 디바이스	0.07	485	224
8542	반도체	0.02	783	870
8504	변압기	-0.17	193	222
9018	의료기기	-0.22	184	260

주: HS 4단위 중 교역 4억 달러, 무역특화지수 0.3~0.3 품목(무역특화지수는 3년 평균)  
 자료: Kita.net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8) 안주희(2009). “한-EU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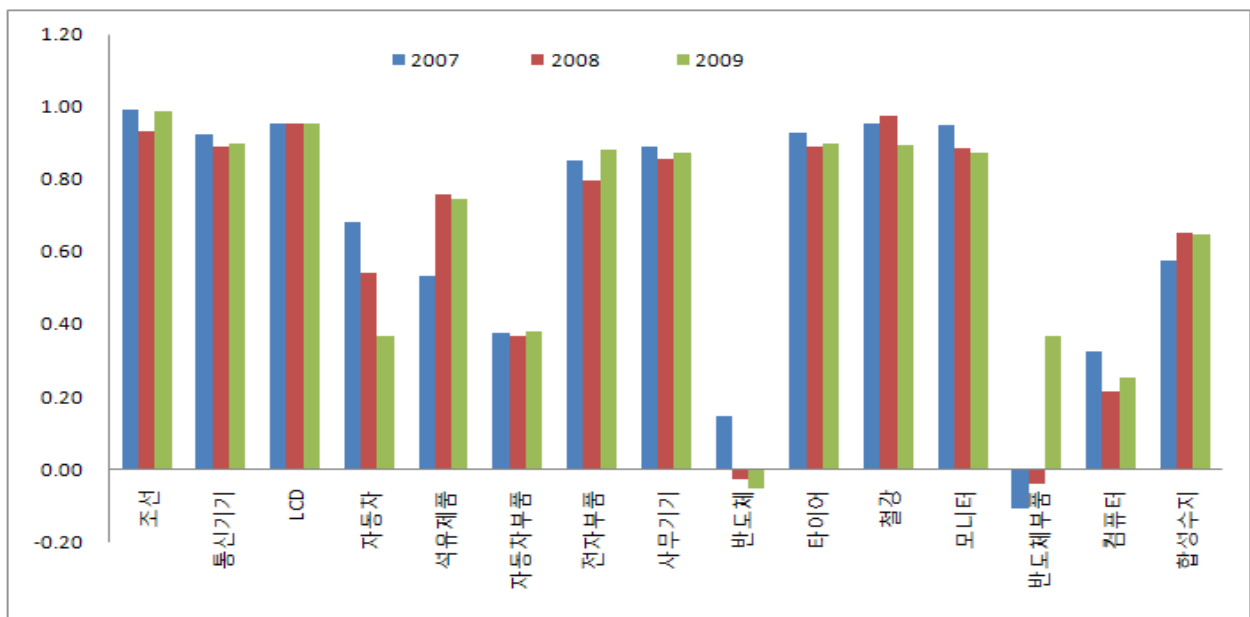
### 산업 내 무역지수

- ▷ 동종 산업에서 수출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무역을 ‘산업 내 무역’이라 지칭
  - 산업 간에 일방적인 수출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산업 간 무역에 대비되는 개념
- ▷ 산업 내 무역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전체 무역 중 산업 내 무역 비중이 큰 것을 의미
  - 순수출의 절대값을 교역액으로 나눈 값을 1에서 차감

□ (주요 품목 무역특화지수의 최근 변화 추이) 수출 상위 15개 품목의 최근 경쟁력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품목에서 경쟁력 하락 현상이 지속

- 최근 3년간 자동차, 반도체 품목의 무역특화지수가 경쟁열위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경쟁력 하락이 우려
  - 특히 반도체는 완제품 및 부품의 對EU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특화지수가 양에서 음으로 전환
- 반면 LCD, 석유 제품, 합성수지 제품 등은 금융위기 기간에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수출 상위 15개 품목의 경쟁력 추이



자료: Kita.net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경쟁력과 분업구조를 고려해 업종별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

- (기업의 대응) 기존 경쟁력과 분업구조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경쟁력 우위 업종: 적극적인 시장접근 전략(예: 조선, LCD, 통신기기, 가전, 전자부품, 석유, 자동차 등)
    - 품목별 관세양허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 계획을 수립
    - 경쟁국 대비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적극 활용
  - 경쟁력 균형 업종: 비용절감 및 적극적인 협력전략(예: 가구, 조립금속, 석유화학, 컴퓨터, 섬유 등)
    - 해외투자 및 국내 진출 EU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분업의 확대로 생산비용을 최대한 절감
    - 핵심경쟁력 확보와 병행한 분업 등 제휴 전략을 구사
  - 경쟁력 열위 업종: 정부지원 및 생존전략(예: 의약품, 정밀화학, 비철금속, 펌프, 파이프, 일반기계 등)
    - 정부지원하에 구조조정 추진
    -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M&A 등 생존전략 추진

### 업종별 차별화 전략

	경쟁력 우위 업종	경쟁력 균형 업종	경쟁력 열위 업종
전략	시장접근전략	비용절감 및 협력전략	정부지원 및 생존전략
대응	- 품목별 관세양허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출확대 계획을 수립 - 경쟁국 대비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적극 활용	- 해외투자 및 국내진출 EU 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분업확대로 생산비용 절감 - 핵심경쟁력 확보와 병행한 분업전략 실시	- 구조조정 실시 -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M&A 등 생존전략 추진
업종	조선, LCD, 통신기기, 가전, 전자부품, 석유, 자동차 등	가구, 조립금속, 석유화학, 컴퓨터, 섬유 등	의약품, 정밀화학, 비철금속, 펌프, 파이프, 일반기계 등

자료: 안주희 (2009). “한-EU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 (2) 관세인하 효과 극대화

### 품목별 및 시기별로 관세인하 스케줄을 인지

□ (산업별 관세 조기철폐 비율) 자국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관세 조기철폐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

- 한국은 기계·화학, EU는 자동차 부문에서 조기철폐 비율을 낮게 합의
  - EU는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액 중 72.2%만 조기철폐할 예정이며, 한국은 기계의 수입액 중 81.7%만을 조기철폐할 예정
- 반면 EU는 섬유, 석유화학, 정밀화학, 철강,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의 산업부문에서 관세를 조기철폐할 예정
  - 한국은 철강부문의 전 품목에 대하여 조기철폐를 실시

양국 간 업종별 조기철폐 비율(수입액 기준)

(단위: %)

산업구분	조기철폐비율		조기철폐 주요 품목	
	한국	EU	EU의 對한국 수출	한국의 對EU 수출(관세율)
자동차 및 부품	95.1	72.2	중·대형차(1,500cc 초과) 3년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을 즉시철폐	
전기전자	96.5	97.8	반도체 생산부품, 발전기, 축전지, 가전제품, 무선기기	TV(14), TV부품(5), 비디오(14), 라디오(12), 배터리(4.7)
섬유	82.8	99.9	면사, 아크릴사, 일부 양모사, 가죽제품, 의류	일부모직물제외 전품목 즉시철폐(7~12)
기계	81.7	98.7	공구, 펌프, 공조기, 인쇄기, 연삭기, 밸브, 베어링, 계측기	베어링(8), 광학기(6.7), 엔진 부품(4.2), 밸브(2.2), 펌프(1.7)
석유화학	87.3	100	폴리아미드, 실리콘,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제품 등	폴리에틸렌, ABS 제외 전 품목 즉시철폐(0~6.5)
정밀화학	86.9	100	정밀화학원료, 색조화장품, 의약품, 세라믹, 유리 등	세라믹, 유리제품 제외 전 품목 즉시철폐(0~12)
철강	100	100	기타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제외 전 품목 즉시철폐	전 품목 즉시철폐(0~7)
비철금속	87.8	100	니켈, 아연, 주석제품, 동·알루미늄 제품 일부	일부 동제품 제외 전 품목 즉시철폐(1.5~10)
생활용품	91.4	100	신발, 타이어, 안경, 악기, 연필·만년필 등	일부 가방, 신발, 타이어 제외 전 품목 즉시철폐(3~17)

자료: 지식경제부 (2009). "한-EU FT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 관세가 즉시 인하되는 품목과 순차적일지라도 큰 폭으로 인하되는 품목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
  - FTA는 상품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세율을 모두 철폐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품목은 관세는 중장기(5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
  - 수출 측면(한국→EU)
    - 즉시 인하 품목: 모 스웨터(13%), 편직제 의류(12%), 편직물(8%), 아세탈수지(6.5%), 자동차부품(4.5%) 등
    - 관세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품목: 컬러TV·수상기·VCR(14%, 5년), 중·대형 승용차(10%, 3년), 소형승용차(10%, 5년), 베어링·순모직물(8%, 5년), ABS 수지(6.5%, 3년) 등
  - 수입 측면(EU→한국)
    - 즉시 인하 품목: 직물제 의류(8~13%), 자동차부품(8%), 컬러TV(8%), 냉장고(8%), 계측기(8%), 염료(6.5~8%) 등
    - 관세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품목: 기타 기계류(16% 7년), 모직물(13%, 7년), 중·대형 승용차(8%, 3년), 소형승용차(8%, 5년), 스피커(8%, 3년), 플라스틱 제품(8%, 3년) 등
- 기업은 주력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스케줄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비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 관세인하 품목 및 스케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정식협정문 및 정부 발표 자료를 참고<sup>19)</sup>
  - 수출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뿐만 아니라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 변화를 파악하여 수출 전략을 수립

19) 외교통상부 (2009).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한-EU FTA 정식협정문.; 관계부처합동 (2009). “한-EU FTA 상세 설명 자료.” 등



## 관세 인하를 활용한 사업전략 모델

□ 수출입 형태를 고려하여 품목별·기업별 상황에 맞는 활용방안을 모색

- 직접 수출 모델: 對EU 수출 확대를 추구

- 기존의 對EU 수출 기업을 위한 모델로 품목별 및 시기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인하됨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

### 對EU 타이어 수출 기업의 사업전략 전환 검토 사례

- ▷ 현재상황: EU에 타이어 제조기업 11개, 공장 88개, R&D 센터 14개 존재  
경쟁 제품 가격은 톱 브랜드인 미쉐린의 80%로 한국 제품과 비슷한 수준
- ▷ 기대효과: 한-EU FTA가 발효되면 수입관세 4.5%가 3년 내 철폐  
EU의 주요 타이어 수입국 가운데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
- ▷ 활용전략 검토: 면세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릴지(가격인하), 회사의 수익성을 추구(이익증대)할지, 연구를 강화(기술발전)할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

- 간접 수출 모델: EU의 FTA 상대국을 활용

- EU에서 제품을 가공한 후 EU의 FTA 상대국<sup>20)</sup>에 수출하는 방식 또는 EU의 FTA 상대국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EU에 수출

### 상대국 FTA를 활용한 티셔츠 수출 활용 사례

- ▷ 활용 전: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T셔츠를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  
티셔츠 가격 5,025원 (중국 내 가공·운송비: 2,532원, 일본 관세: 493원)
- ▷ 활용 후: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티셔츠를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  
티셔츠 가격 4,648원 (말레이시아 내 가공·운송비: 2,648원, 일본 관세: 0원)
- ▷ 결과: FTA를 활용할 경우 377원 저렴 (가격경쟁력 제고)

- 수입선 전환 모델: 제품의 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 EU로 전환

- EU 제품의 생산 체제 및 시장 수용성 검토

### 한-EU FTA 이후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對日 무역역조 개선 가능성

- ▷ 현재상황: EU의 우수한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활용이 미흡  
주요 부품·소재 항목 12개 중 8개 분야에서 EU의 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세
- ▷ FTA 활용: 가격인하, 접근성 향상 등이 이루어진다면 수입대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20) 터키, 남아공, 이스라엘, 멕시코, 이집트 등 (본 보고서 4p 참조)

### (3) 원산지규정에 대한 대비

#### 복잡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

□ (원산지규정의 정의와 구성) 무역의 왜곡을 방지<sup>21)</sup>하는 것이 목적인 원산지규정은 그 정의와 구성이 매우 복잡

- 원산지규정: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이 생산·제조·가공된 국가로 정의됨
  - 이는 다시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sup>22)</sup>과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sup>23)</sup>으로 구분
- 원산지규정의 구성: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및 그 확인절차 등을 포함
  - 원산지결정기준이 원산지규정의 핵심으로 가장 복잡하게 구성
  - 원산지결정기준은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세칙에 해당하는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
  - 원산지 결정 시에는 해당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함께 적용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일반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분야별특례	누적기준, 미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소매용·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외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 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부가가치기준	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가공공정기준	특정 공정을 한국에서 처리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자료: 변재준 (2010).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FTA 활용방안 (KIEP 세미나 자료)』, 3월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21) 관세가 낮은 국가를 통해 수입된 물품이 관세가 높은 국가로 관세 없이 재수출되는 것을 방지

22) GATT 1994상의 최혜국대우나 그 밖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원산지표시요건 및 여하한 차별적인 수량제한조치 등

23) GATT 1994 제1조 1항의 최혜국 대우 적용 예외에 해당하며, 관세특혜 부여를 규정한 특혜무역협정과 같은 자발적 무역제도

□ (일반기준에 대한 이해)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로 구성

-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등
  - 완전생산기준: 모든 생산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 역내가공원칙: 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충분가공원칙: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직접운송원칙: 원산지로 결정되어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세트물품, 중립재료 등
  - 누적기준: 역내산(EU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
  - 세트물품: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 가격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중립재료: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으나, 최종재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연료, 도구, 장비 등의 재료는 원산지 판정을 하는 데 고려하지 않음

□ (품목별기준에 대한 이해)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세칙으로서 별표로 규정

- 세번변경기준(CTH):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최종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 HS 2단위, 4단위, 6단위) 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
- 부가가치기준(VAR):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 (예: 공장도가격 기준의 45%)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
- 가공공정 기준: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 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

## 한-EU FTA의 원산지규정

- (한-EU FTA의 원산지규정) 까다로운 원산지기준 충족 요건을 고수하던 EU는 한국과의 FTA에서는 기준을 다소 완화
- EU는 회원국들이 경제통합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높이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설정
    - 동유럽 국가까지 회원국으로 확대되면서 자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비율이 높아짐
  - 한-EU FTA에서는 대부분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

품목	원산지 기준
자동차	▷완성차: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 45% 이하
	▷자동차 부품: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 50% 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
기계 및 전기전자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부품 사용 비율 45~50%
합성수지	▷세번변경기준 - 일부 역외산 부품 사용 비율 50%
의류	▷직물기준(Fabric forward) - FTA 체결국 내에서 사용된 직물을 이용해 완제품 수출 시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함 - 원사부터 역내산을 사용해야 하는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forward)보다 완화된 기준 - 단, 섬유사 및 직물 중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스코레이온사 및 나일론 스테이플사는 일정범위 내에서 역외산 사용을 허용
화학제품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 적용
비철금속	▷세번변경기준 적용 - 구리와 알루미늄의 일부 품목은 역외산 부품 비율 50%
신발	▷역외산 갑피(upper)와 안창(inner sole) 사용이 인정되나, 갑피가 안창에 부착된 채로 수입된 것은 불허
	▷다만, 선택적으로 부가가치기준 50% 이하 기준 적용 가능

자료: 관계부처합동 (2009). “한-EU FTA 상세 설명자료.”

□ (원산지결정기준의 문제점) 많은 수의 FTA가 체결되면서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

- 품목별로 다른 원산지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각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혼선을 초래
- 기관발급제: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 자율발급제: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미 FTA, 한-EU FTA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	한-EU
증명방식	자율	기관	자율	기관	자율	자율
증명주체	수출자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싱가포르) 세관	수출자 생산자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ASEAN) 국가별 지정기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증명방법	양국 간 통일증명서식	양국 각자증명서식	인보이스 신고방식	양국 간 통일증명서식	무형식 (필수사항만 기재)	인보이스 신고방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월	4년	1년

자료: 김한성 외 (2008).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KIEP.

□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이 미흡

- 한-EU FTA 발효 초기 EU 세관에서 자국과의 경쟁 산업인 자동차와 섬유 등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됨
- EU는 중국산 상품이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위조해 수출될 가능성을 매우 우려<sup>24)</sup>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규정과 각국별로 다른 기준 때문에 원산지규정에 대한 대책마련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할 소지
-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킬 위험<sup>25)</sup>

24) 2007년부터 중국산 철강제 와이어 로프가 한국산으로 위조되어 집중적으로 EU에 수출되자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 → EU 시장에서의 신뢰 하락으로 2009년도에 동제품 수출은 전무한 실정

25) 스파게티볼 효과: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는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용어로, 접시 안에 얹힌 채 담겨 있는 스파게티를 이에 비유한 것

## 기업은 원산지규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기업의 대응) EU는 한국의 既발효 FTA 체결 상대국과는 달리 원산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로 분류되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 전략을 수립
    - 수출계약 시 원산지기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 상품별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비율 점검
    - 충분한 생산공정 확보
  - 원산지 리스크 관리 및 자체 확인 프로그램을 구축
    - 기업 내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 작성
    - 원재료 목록 작성 및 원산지 확인
    - 생산공정 확인 및 최종제품 원산지 결정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원산지 관련 전담 직원 배치 및 역량 강화
    - FTA 원산지규정, HS 품목분류, 원가회계, 통관실무, 무역실무, 어학능력, 무역영어 등의 분야에서 전문화된 인력 배치
  -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 관리
    - 원산지 입증책임: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순서
    - 원산지 검증 및 실사를 대비한 서류의 보관
  - 무역계약서 작성 시 원산지 오류 클레임 청구권 명시
    - 해외 수출자의 원산지 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입자에 귀속
    - 해외 수출자/생산자 과실에 따른 국내 수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상 의무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
  - 구매계약서 작성 시 원산지 오류 클레임 청구권 명시
    - 국내 공급자/생산자 구매계약 시 원산지 확인 의무를 명시

#### (4) 협력을 통한 비관세장벽 극복

#####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부족

□ 환경규제, 기술표준 등 EU의 비관세장벽은 더욱 강화될 전망

- EU는 1995년 4월 채택된 환경관리감시제도(EMAS)를 토대로 2008년까지 200여 개 이상의 환경 관련 법안을 상정
- 원료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환경규제를 실시
  -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 폐차처리지침(ELV) 등
- 친환경설계지침(EuP)은 PC, TV, 복사기, 냉장고 등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를 강제하기 위해 마련
  - 수출 총액의 30% 이상인 전기·전자 관련 제품이 모두 EuP의 규제 대상
- 회원국이 확대되고 내부적으로 경제 및 정치적 통합이 심화되면서 기술 표준 분야에서의 제도 개편을 시행

□ 하지만 한국기업들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환경규제나 기술표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중소기업 116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연계된 환경규제에 대해 응답자의 60.3%가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2009년)
-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통관절차나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

□ EU 기업들도 기술표준이나 환경규제의 적용대상이었던 만큼 EU 기업들의 규제 강화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활용할 필요

##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모색

- EU는 정책적으로 환경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세계에서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등 최고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보유
  - EU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글로벌 규제 강화를 선도
    - 에코라벨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EU 에너지 효율 개선 행동 계획(EU energy efficiency action)<sup>26)</sup> 수립
    - REACH 도입으로 2008년 6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공산품의 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
    - 환경세도입 및 자동차 CO<sub>2</sub> 배출량을 2012년까지 120g/km으로 감축, 가전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등급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sup>27)</sup>
  - EU 기업들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친환경산업을 선도
    - 수비적 녹색성장(저탄소화)과 공격적 녹색성장(녹색산업화) 전략으로 녹색기술 및 친환경 비즈니스를 통한 신시장 개척에 주력
    - 에릭슨 등 EU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도 대거 진출한 상태
  - 에너지 절감·효율 제품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
    - 에너지 절전형 가전제품, 고효율 LED 조명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냉난방용 히트펌프, 펠릿보일러, 절전형 자동차 용품 등이 유망
    - 진출에 앞서 EU 기업이 요구하는 국제공인인증서(CE마크, DIN 규격, 에너지 라벨 등) 취득이 시급

### EU 국가군별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의 차이

- ▷ 서유럽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
- ▷ 동유럽, 터키 등 EU 가입 후보국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대 추진
- ▷ EU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15.3%(2007) → 16.4%(2008)

26) EU의 에너지소비 감축 목표와 조화되도록 EU회원국들에게 의무적인 에너지효율 목표를 법적으로 제안하고, 국가에너지 효율향상인증계획(National White Certificate S초들) 설정을 요구할 것 등

27) 도건우·박환일 (2010). “녹색보호주의의 대두와 대응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한-EU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진출방안과 차별적 접근방식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
  - 에릭슨 등 한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EU 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EU 시장에서의 합작·제휴 등을 검토할 필요
  - LED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친환경 자동차 용품의 경우 현지 유력기업과의 파트너십이나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할 필요
  - 특히 태양광, 풍력발전 기자재 시장의 진출이 유망



#### IT 기술 기반 에코시스템 개발 협력에 나선 에릭슨

- ▷ 에릭슨과 한국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및 M2M(Machine to Machine) 같은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그린 에코 시스템을 창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 한국의 우수한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기후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커뮤니티를 설립할 계획이며, 상호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

-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에 차별적으로 진출
  - 한국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세 분야 시장은 10년 후 3배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
  - 시장경쟁과 성숙도에 따라 양방향으로 신규투자, 전략적 제휴, 합작벤처, 인수합병 등 차별적 접근이 필요

#### 한-EU 기업 간 협력 사례

- ▷ 네덜란드 오수처리장치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사례: T.E.N.-K7 Co. 합작벤처
- ▷ 기술력 있는 풍력 터빈 제조업체와 한국 중공업 업체와 제휴: E.U.M.-한국 중공업 업체 간 협상이 진행 중
- ▷ 한국 은행의 독일 소음감소장치 제조업체 인수: G.N.R.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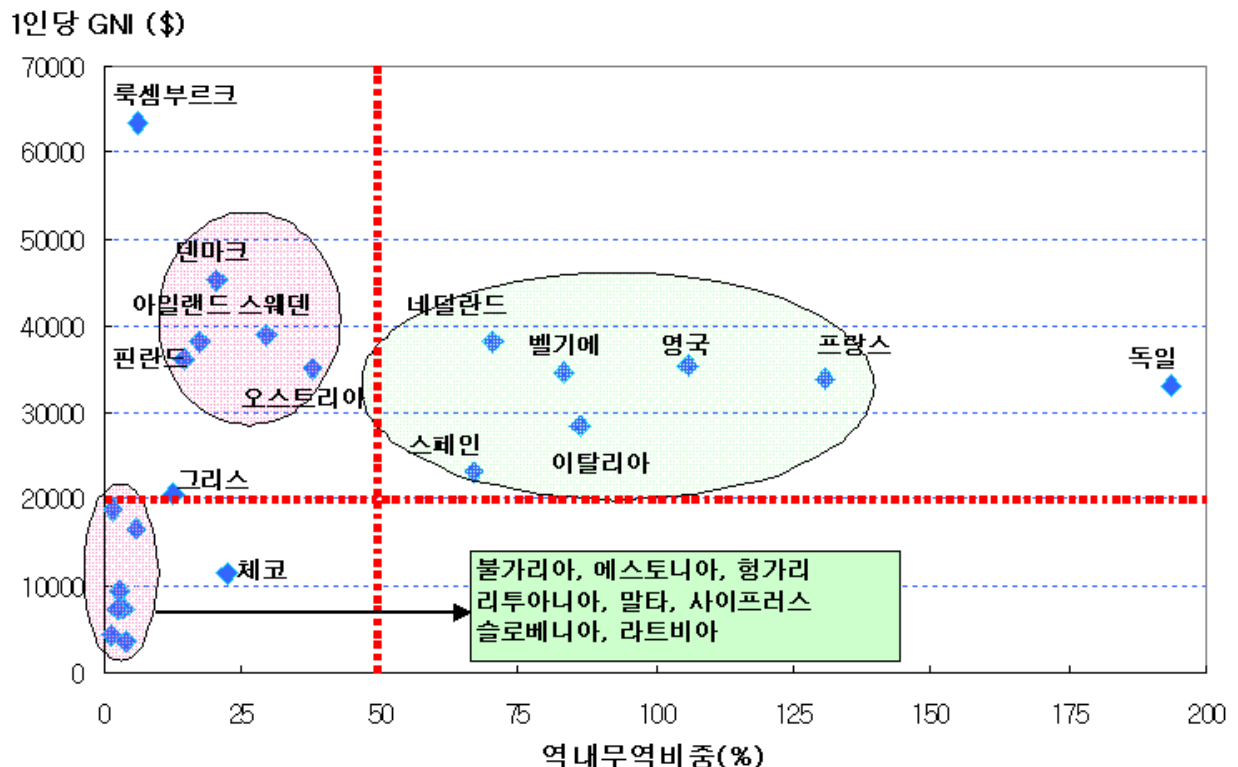
## (5) EU 비즈니스 환경 이해

### 특수성 및 다양성을 지닌 EU 시장에 대한 이해 필요

□ EU 시장은 회원국 간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는 한편, 회원국별로 소비자 선호가 다양

- 회원국 간 높은 상호의존성과 소득 수준의 다양성이 공존
  - 신규 회원국(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등)과 기존 회원국 간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국 간에도 역내무역비중(수입)과 소득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들은 역내무역비중(수입)이 높고 1인당 GNI가 2만 달러 이상을 유지

EU 회원국 역내무역비중 · 소득수준 비교



주: 1) 역내무역비중은 EU 전체 수입 부문에서 개별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00~2009년 기간 동안의 연간 비중을 단순 합계한 값

2) 1인당 GNI는 2000~2009년 동안의 단순 평균값

자료: UN, Comtrade DB.; Eurostat

□ EU 시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

- 획일성에 기반한 제품은 유럽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데 역부족
  - 미국 대형 할인점 월마트가 독일에 획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려다 실패하고 철수한 사례는 유럽인들의 소비 양식을 잘못 이해한 탓



#### 현지 소비자를 사로잡지 못한 월마트 독일 진출

- ▷ 자국시장에서 성공한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형 기본 슈퍼마켓 체인을 유럽 대륙에 그대로 적용한 월마트는 독일시장 진출에 실패하고 2006년 독일 85개 매장을 독일 최대 유통업체인 메트로에 매각하기로 결정, 총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음. 월마트의 사례는 투자확대만으로는 유럽 현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된, 현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필요함을 시사

- 독특한 가치관이 소비 양식에 반영
  - 동물실험 제품에 대한 거부감, 브랜드의 상징적 가치보다 기능적·경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sup>28)</sup> 등이 형성



#### 환경보호 및 동물보호로 소비자의 심리를 잡은 영국의 바디샵<sup>29)</sup>

- ▷ 1976년 영국 남부 해변도시 브링톤에서 작은 화장품가게로 출발한 바디샵은 환경유해 성분 원료를 배제한 자연친화적 제품과 재활용 화장품 용기를 사용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에 기부. EU에서는 현재 동물 실험이 행해진 화장품과 원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바디샵은 동물실험 반대 운동을 펼쳐 유럽의 소비자를 사로잡음. 600가지가 넘는 바디샵의 식물성 제품은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1,700개가 넘는 매장에서 0.4초마다 1개씩 팔리고 있음

28) 브랜드의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에 소비자가 부여한 개인적인 가치에 따른 편익 면에서 기능적, 경험적, 상징적 편익으로 나뉨. 기능적 편익은 주로 제품 속성과 관련되고, 심리적 안전 욕구나 문제 제거 또는 회피욕구가 이에 포함되며, 경험적 편익은 감각적 기쁨, 다양성, 인지적 자극 등이며, 상징적 편익은 사회적 승인, 개인표현, 자기만족 등

29) The Body Shop International plc

## 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EU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

□ 리스본조약 발효로 기업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부정적 측면도 우려

- 리스본조약에 따른 EU의 권한 강화로 시장 통합이 확대될 전망
  - 리스본조약 발효로 EU가 EC를 법적으로 승계하면서 EU의 독자적 권한 행사가 가능: 국제기구 회원 가입 또는 국제협정 체결 가능
  - 다수결제 적용에 따른 의사결정기간 단축으로 경영 불확실성 해소
- 단일시장 강화로 EU 및 외국 기업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 세제 및 노동정책 등의 국가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EU 법률 제정 증가로 회원국 간 규정 부조화 문제 해소
  - 제3국과 신속한 투자협정 체결 등으로 EU 및 외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여건 개선
- 다만 규제 강화와 보호주의 등 우려할 부분도 상존
  - 환경규제 및 기술표준 강화가 예상되며,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등으로 인한 무역규제가 증가할 우려
  - 권한이 강화된 유럽의회의 주도로 보호주의가 강화될 가능성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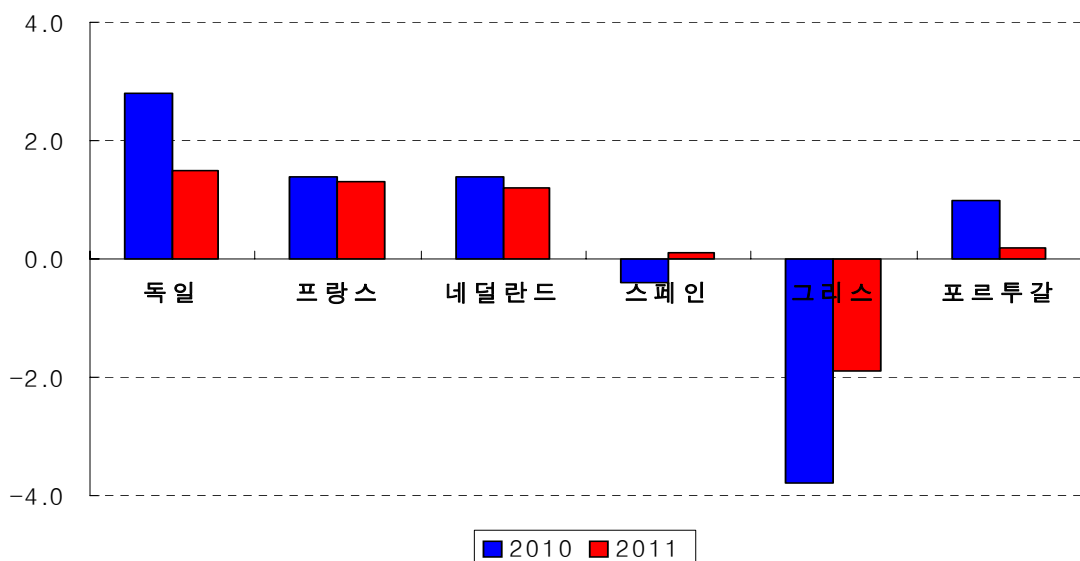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시장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략 수립이 관건

- 정부 및 민간주도형 구조조정과 기업파산, 프로젝트 취소, 미결제분쟁 등 기업부문의 생산성 악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 2010~2014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평균 기대치(1.91%)는 세계(4.43%)와 미국(2.59%)을 하회
- 금융위기 충격으로 EU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민간소비 침체도 우려<sup>30)</sup>

30) 산업생산의 경우 룩셈부르크(+15.9%), 아일랜드(+11.8%) 등 14개 회원국이 증가하고 그리스(-10.4%), 불가리아(-9.8%) 등 8개국은 감소했으며, 민간소비는 리투아니아(-17.1%), 라트비아(-13.3%) 등 14개 회원국이 감소하고 오스트리아(+3.2%), 몰타(+3.1%), 영국(+2.8%) 등 6개국만 증가

- EU 시장의 회복세는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뿐 아니라 일부 국가는 재정위기에 봉착
  - EU 및 개별 회원국의 경기부양책과 구제금융 시행으로 실물경제가 다소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나 공공재정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
  - 영국과 남유럽 등은 불안정에 따른 추가 부양조치로 재정투자를 확대해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
- 유로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강한 시장통합에도 불구하고 PIGS 국가의 재정악화로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전염성이 강해지는 추세
  - 특히 서유럽의 성장세는 비교적 양호한 반면, 남유럽 국가<sup>31)</sup>들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회원국 간 양극화 현상<sup>32)</sup>이 단일통화 기반을 불안하게 만드는 리스크 요인

EU 지역의 양극화 지속 전망



자료: Eurostat

31) 특히 아일랜드 경제는 2/4분기 0.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재정적자 문제 회원국들의 긴축재정 이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

32) 2010년 EU 지역의 경제성장은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 특히 독일의 2/4분기 성장률은 통일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

## EU 소비자들의 보수적 소비 패턴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유럽인들의 소비 패턴에도 주목

- 불확실성 지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럽 소비자들의 신중하고 까다로운 구매 태도에 적극 대비할 필요
- 저가 제품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대
- 하이패션과 고가 가전판매가 둔화되는 반면, 에너지 절약상품과 소형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증가

### 저가 화장품 소비로 돌아선 그리스 여성들<sup>33)</sup>

▷ 과일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천연 화장을 주로 생산해온 그리스(약 70개사)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수입한 고급 브랜드 화장품이 대량 유통되어 왔음. 그러나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 악화와 국가 부도설, 수입 감소 등으로 여성 소비자들이 화장품 지출을 줄이기 시작. 그리스 화장품 유통업의 약 40%를 차지하는 Hondos Center의 경우 2009년 4/4분기 대비 2010년 1/4분기 판매율이 12% 감소하는 등 그리스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저가 유통 채널이 확산<sup>34)</sup>
  - 백화점 대형 유통점이 고전하는 반면, 하드 디스카운트 매장이 상대적으로 약진하고 인터넷쇼핑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가 인기
  -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판매도 증가 추세
-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중요
  -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상품을 선호하는 까다로운 구매태도가 강화

33) KOTRA, 해외시장 정보,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4) 1990년대 중후반에는 저렴한 가격의 대량구매를 선호하던 경향이 중저가의 고품질 구매로 선회. 소비자의 선호 변화에 맞추어 유럽의 대형슈퍼마켓 체인들(Tesco, Home Base 등)도 저가 공급정책에서 중저가 공급정책으로 선회. 맥스 & 스펜서 등 중저가 브랜드를 공급하는 백화점 체인도 성행

## IV. 시사점 및 종합 활용방안

### 기업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

- 종합적으로 한-EU FTA는 EU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공
  -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EU 시장에서 2%대의 점유율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고관세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
    - 관세율이 10% 이상인 고관세 품목은 전기전자(46개), 자동차(41개) 등 524개 품목에 달함
- 한-EU FTA를 계기로 주력 수출 품목 이외의 품목들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을 전개할 필요
  - 한국의 수출은 주력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전체 수출에서 30大 주력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80.3%), 미국(49.5%), 일본(50.7%), 중국(51.4%)
  - 對EU 수출의 주력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對中 및 對美 수출보다 심각
    - 주력품목 비중 : 10大 품목(63.3%), 30大 품목(74.8%), 50大 품목(86.2%)

수출 시장별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 비교

(단위: %)

구분	對EU	對미국	對중국	對세계
상위 10대	63.3	54.5	48.4	49.2
20	74.8	65.8	63.2	60.4
30	80.1	72.4	72.6	67.7
40	83.5	76.8	78.5	73.2
50	86.2	80.3	82.7	77.2

주: 1) 전체 수출액 대비 누적 비중, 2) MTI 4단위 기준, 3) HS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서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

- 高부가가치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 노력은 물론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필요
  -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이 EU와 FTA를 체결하지 못한 틈을 타 한국의 제품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부각
- 서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할 경우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와 '규모의 경제' 효과에 힘입어 동유럽시장 공략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를 재조정

- 완제품 수출기업은 자사 상품이 EU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필요하다면 생산거점을 구조조정하거나 역할을 재조정
- 해외 생산라인을 통해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들도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생산거점 재배치 여부를 결정
- EU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은 관세율이 높았던 품목의 경우 해외 생산 공정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 국내 시장 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

-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직접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한국 내 생산을 늘릴 가능성에도 대비
- 한국 내 사업 기반이 약한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 활용
  - 이들 기업과 전략적 제휴, M&A, 합작법인 설립, 마케팅 및 R&D 채널 공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협력방안 모색



## 기업은 한-EU FTA 대응 매뉴얼 수립

□ 한-EU FTA가 기업에 미칠 영향과 핵심 비즈니스 전략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 관세, 거래가격, 재료조달처, 생산입지, 운송경로, 원산지증명 등을 고려

### 기업의 한-EU FTA 활용전략

분야	영향	대응	필요역량
관세	- 관세인하 - 국가별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	- 국가별/품목별 관세율 차이 분석 - FTA 이용 시 거래가격 조정 가능 폭 분석	- 관세율 지식 - 품목분류 지식
거래가격	- 수출입 가격의 인하	- 수출 판매량 확대를 위한 바이어와의 가격 인하 협상전략 - 수입 관세 인하 분만큼 국내 판매가격 인하 여부 검토	- 협상 역량 - 상품가격 정보
재료조달 생산입지	- 계약상대국 재료를 국산으로 인정 - 계약상대국 재료를 국내 공정으로 인정 - 역외 가공 허용	- 현행 체제하에서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여부 분석 -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책을 검토 (재료구입처 전환, 위탁 가공 축소, 역외공장 역내 이전 등)	- 원산지규정 지식 - 생산공정 지식 - 재료공급처 정보 - 생산입지
운송	- 양국 간 직접 운송이 요구	- 제3국 경유 운송 축소 방안 - 제3국 단순 경유 입증 방안	- 물류정보
원산지증명	- 국가별로 다른 원산지 증명방식 및 검증 - 외국세관이 수출자를 방문하여 조사	-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효율화 - 회계자료와 원산지 결정 자료의 상호 부합성 확보	- 원산지증명 및 검증에 대한 지식 - 회계기준 지식 - 원산지 관리 시스템
비관세장벽	- 제도의 복잡·다양성	- 전문인력 확보 - EU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노하우 습득	-

자료: 관계부처합동 (2009). “한-EU FTA, 한-인도 CEPA 설명회.”

## 수출업체의 한-EU FTA 활용 매뉴얼

### □ 한-EU FTA 이후 기업의 수출 업무 진행요령 및 유의사항

- (1단계) 협정 발효국 및 관세혜택 확인
  - 협정이 체결되어도 발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효일자를 확인할 필요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 및 FTA별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를 활용할 경우의 혜택을 분석
- (2단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
  - 수작업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구입 재료의 원산지는 공급자 발급 원산지 확인서로 확인함으로써 입증 부담을 완화
  -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되면 간편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sup>35)</sup>
- (3단계) 관련 자료의 보관
  - 상품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송부
  - 한국 수출자가 재료 및 제품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국내법으로 처벌됨을 유의
  - 한국 수출자가 상대방 수입국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방문검증에 응하지 않으면 수출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통관상 불이익에 직면
- (4단계)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기업 회계 시스템과 재료별 원산지 정보를 연계하여 원산지 확인, 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자료까지 일괄 관리
  - 부품번호, 품명, HS번호, 가격, 소요량, 원산지, 공급자, C/O(원산지증명) 번호, 수출입신고번호, 원산지기준 상호 연계

35) 한-EU FTA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C/O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

## 수입업체의 한-EU FTA 활용 매뉴얼

### □ 한-EU FTA 이후 기업의 수입 업무 진행요령 및 유의사항

- (1단계) 협정 발효국 및 관세혜택 확인
  - 협정이 체결되어도 발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별 발효일자를 확인할 필요
  -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및 FTA별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를 활용할 경우 얻을 가능성이 있는 혜택을 분석
- (2단계) 원산지 증빙 서류의 구비
  -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및 직접 운송 입증서류를 확보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주체, 유효기간, 품명, 규격, 수량, 서명자 등 제반 요건이 적합한지 확인
  - 제3국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 단순경유 입증서류를 확보<sup>36)</sup>: Through Bill of Landing, Transhipment Certificate of Origin 등
- (3단계)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및 관련 자료 보관
  - 협정관세: 통관 시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고 사후에 신청하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계약서, 운송서류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보관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됨
- (4단계) 수입 계약 시 수출자의 책임을 계약서에 명문화
  - 수입자는 제출하고자 하나, 수출자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자는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
  - 수출자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공, 한국 세관의 조사 불응 등 수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수입자 손해에 대해 수출자의 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화

36) 제3국 경유 입증서류는 물품이 경유국을 떠난 후에는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출자 및 운송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경유 당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9).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9). “한-EU FTA, 한-인도 CEPA 설명회.”
- 국회도서관 (2009). 『한-EU FTA 한눈에 보기』. FactBook.
- 기획재정부 (2009). “한-EU FTA 주요내용 및 국내대책 추진방향”.
- 김도훈 (2007). “한-EU FTA와 제조업 교역분야 주요 이슈”. 『KIET 산업경제』, 1월호, 31-43.
- 김득갑 (2007).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김선화 外 (2007). “한-EU FTA에 대한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반응 조사” (Global Business Report 07-035). KOTRA.
- \_\_\_\_\_ (2009). “한-EU FTA 수출 유망품목 및 활용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9-027). KOTRA.
- 김화년·정호성 (2009). “한국의 既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송원근 (2008).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 시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안덕근 (2010). “EU의 기술표준과 통상문제”. 『EU Brief』, 2(4), 15-18.
- 안주희 (2009). “한-EU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 외교통상부 (2009). “한-EU FTA 상세 설명자료”.
- \_\_\_\_\_ (2009. 8. 25.). “한-EU FTA 관련 교섭대표 브리핑”.
- 이영주 (2009). “중소기업의 대EU 산업협력 구조적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8월호, 40-52.
- 이종규 外 (2009).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한-EU FTA 체결시 연간 교역규모 24조원 전망”. 『FKI Briefs』, 415.
- 정대철 (2009). “한-EU FTA 체결과 경남경제의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 정부합동 (2009). “한-EU FTA, 한-인도 CEPA 설명회”.

- 정인교 外 (2008). 『한-미 FTA 100% 활용하기: 비즈니스맨을 위한 한-미 FTA 핸드북』. 한국무역협회.
- 조성대 (2009). “한-EU FTA 타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_\_\_\_\_ (2009). “한-EU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주요국 동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중소기업중앙회 (2009). “한-EU FTA와 수출 증기 경쟁력실태조사 보고서”.
- “중소 수출업체 75%, FTA 대응 포기.” (2010. 4. 11.). 『파이낸셜뉴스』.
- 지식경제부 (2009). “한-EU FT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 최낙균 外 (2009).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 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 방향”. KIEP.
- 한국무역협회 (2009). “한-EU FTA 발효 시 미국의 對한국 수출 11억 달러 감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화장품산업 FTA 비즈니스 모델”.
- KOTRA (2009). “한-EU FTA 10대 수출유망 품목 및 활용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9-027).

국제금융센터, 통계자료 DB.

한국무역협회, Kita.net

한국무역협회, KOTIS.

### <영문자료>

- ACEA (2009. 10. 15.). Trade Deal with Korea against the Interest of Major European Industries and Their Force. Press Release.
- Decreux, Y., Milner, C. & Peridy, N. (2010). The Economic Impact of the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European Union and Korea.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08).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EU-Korea FTA: Final Global Analysis Report, Phase1, Phase2, Phase3.
- \_\_\_\_\_ (2009. 10. 15.). EU and South Korea Initial Free Trade Deal. Press Release.
- \_\_\_\_\_ (2010. 9. 17.). EU-Korea Trade Agreement: 10 Key Benefits for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EU집행위 홈페이지

Eurostat

UN, Comtrade DB.

IMF (2010). World Economic Outlook.